

합의 철회 시도민대책위 대표성 논란

원점으로 돌아간 옛 도청 별관 보존방식 논의 제외 5·18단체·시민단체 반발 갈등 재연·문화전당 공사 지연 우려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을 위한 시도민대책위원회(이하 시도민대책위)’가 광주시와의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방식 합의를 철회한 가운데 이 단체의 대표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도민대책위가 55개 시민단체로 결성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주노동당과 민노당광주지부 등 진보연대 소속 단체가 대부분으로, 광주환경운동연합이나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등 대표적인 지역시민단체들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또 합의 철회 등 주요 주제에 대한 논의과정에서도 소규모 단체는 제외되고 있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대표 현안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도민대책위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별관 전체 4층 가운데 3층까지만 철거하고 4층은 연결통로로 남겨놓자는 ‘연결통로’ 방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광주시와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중심도시추진단에 전달했으나 추진단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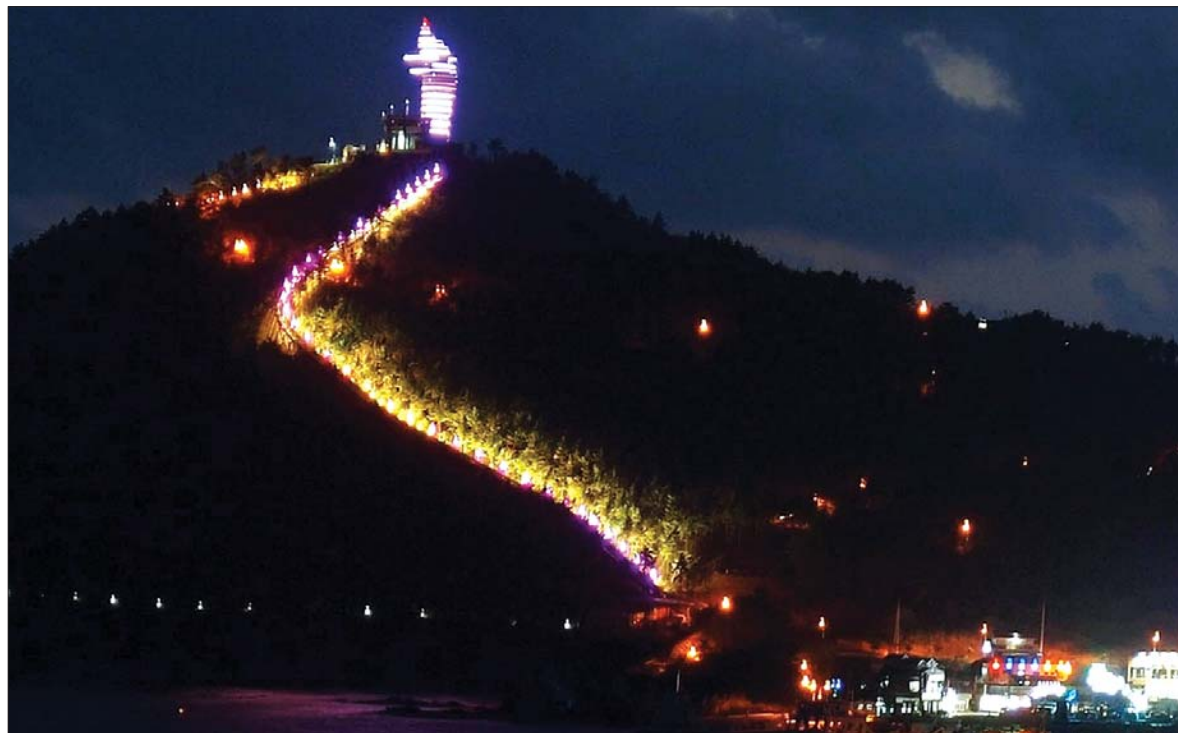
그러나 이 같은 합의 철회로 인해 2년 이상 전당 공사의 발목을 잡아온 옛 도청 별관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지역민의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 시도민대책위가 합의를 철회하면서 향후 협의의 가능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시도민대책위 관계자는 “광주시와 합의할 당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시도민대책위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원형보존이 최선의 안으로, 이를 바탕으로 재논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도민대책위는 이번 주 내 공식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광주시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시도민대책위의 입장 선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옛 전남도청 별관을 둘러싼 합의는 어떤 단계가 합의해 주고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 문제의 당사자는 지역민 모두이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데 대책위라고 해서 합의를 철회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옛 도청 별관 문제를 시도민대책위



황홀한 '땅끝 야경' '한반도의 끝'이자 해남의 대표 관광지인 송지면 땅끝마을이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영으로 단장해 밤 풍경이 확 달라졌다. 해남군은 '땅끝 관광지 야간경관 조영사업'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땅끝에서 시작된 희망의 빛'이란 주제로 빛의 향연을 펼친다.

에 위임했던 5·18단체나 침묵을 지켜왔던 지역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한 5·18단체 관계자는 “협상 권한을 위임했지만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사안이 아니다”며 “이 문제의 당사자가 지역민 모두이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데 대책위라고 해서 합의를 철회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옛 도청 별관 문제를 시도민대책위

가진 것처럼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로 인해 지역 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로 인해 오는 2014년으로 예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 시기가 다시 늦춰질 수 있어 광주시, 지역 민사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20년까지 2조원 이상 투입 남해안 선벨트 새 성장축 육성”

한승희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지역발전위원회가 호남 광역경제권의 양대축인 무궁해·녹색·두뇌산업을 해양·자연·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특히 전남·경남·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선벨트’에 오는 2020년까지 2조원을 넘는 예산을 투입,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렸는데, 이 비율이 10~15%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또 수도권

지난 10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한승희(53)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호남 광역경제권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역발전위의 주요 성과는.
▲3년 동안 광역화·특성화·분권화라는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정립했다. 특히 광주와 대구처럼 광역권을 벗어난 초광역권 연계협력사업도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 간 상생발전도 가능해졌다. 호남권의 경우 광역 연계협력사업 부문에서 타 광역권을 압도하고 있으며, 내년 국비도 125억 6000만원이나 배정받았다.

-열악한 지방재정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렸는데, 이 비율이 10~15%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또 수도권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수입 중 매년 3000억원을 나머지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남해안 선벨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남의 경우 진도 광목항 복합개발사업 등 10여 개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내년 개발구역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 등 초광역개발권 연계협력사업사업도 기본설계중이다.

-LED나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중복 투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엄밀히 따지면 호남권의 선도산업은 LED응용사업과 신재생에너지에서도 태양광·풍력 분야이다. 대경권이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에서는 차별화돼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강구하겠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나섰다

조성 범안 통과...내일 교과부에 유치 제안서 제출

광주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유치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활동에 뛰어들었다.

광주시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오는 14일 이후 교과부 장관을 방문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유치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김영진·이정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계와 언론계·학계의 저명 인사들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위원회’를 구성, 국회 및

정부부처를 상대로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는 ▲기초과학 연구·산업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집적화되어 있으며 ▲광주R&D특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국내·외 접근성이 좋으며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부지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국토균형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7년간 3조 5487억원의 사업비(국비)가 투자

될 사업으로,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진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형 기초연구시설(중이온가속기)을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를 구성해 입지선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하고, 입지가 확정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뒤 거점지구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논리적 근거를 보강해 강점을 집중 부각시켜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해 나갈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F1 출연금 등 202억원 삭감

전남도의회 예결위 5조2344억 예산안 상정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현직 도의원 친목단체 출연비와 F1 조직위원회 출연금 등 41개 사업 202억180만원을 삭감하고 친환경염전장관 개선사업 등 9개 사업 86억 2000만원을 증액한 5조2344억3107만1000원 규모의 ‘2011 전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결위는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전남도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F1(포틀러원) 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100억원) ▲전남도 공무원 인건비(50억) ▲도지사 사·군 수행 방문사건의 사업 지원비(22억원) ▲의정동우회에 지원되는 ‘영산강 사업이 전남발전에 미치는 효과’ 연구비(50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모금사업 보조금(8000만원) ▲남도갯길6000리 생태탐방 행사추

진비(1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그러나 ▲친환경 염전 장관 개선사업(11억7000만원)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14억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15억원) 등을 증액했다.

윤시석 예결위원장은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사업은 철저히 가려내고 도민의 소득창출과 도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뒀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 예결위는 13일부터 이틀간 전남도 교육청의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친일행위 독립유공자 19명 서훈 취소 요청

장지연·윤치영·김응순 등...1996년 이어 두번째

친일행위가 확인된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국가보훈처가 밝혔다.

서훈 취소 요청 대상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간행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독립유공자 20명 중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김성수 등이 일본 창업주를 제외한 19명이다. 취소 결정이 난 이들 중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발표한 5명도 포함됐다.

국가보훈처는 10일 “근현대사 전공 학자, 생존 애국지사 등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19명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다”며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심사 대상자의 유족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했고 유족들이 제출한 소명서 및 소명자료, 관련 문헌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시일이 방심대곡’으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은 1913년부터 1918년간

지 매일신보에 일제의 식민정책을 미화, 장려하는 글을 다수 게재했다는 이유로 서훈취소가 결정됐다.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은 매일신보 등에 친략전쟁 찬양글을 게재하고 1944년 결전국민동원총진회 고문 등을 지내 서훈이 취소됐다.

이 밖에도 친일행적이 드러난 강영석·김우현·김홍량·남천우·박성행·박영희·유재기·윤익선·이동락·이종욱·이항발·임용길·차상명·최준모·최지화·허영호 등도 서훈취소가 결정됐다.

/연합뉴스

Life라는 단어에 if가 들어가 있듯
인생은 알 수 없는 만약으로 가득하죠

만약, 인생에 위기가 닥친다면?
만약,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는다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전세계 7천만 고객의 선택 142년의 노하우
MetLife 금융그룹이 있으니까요.

만약을 위한 든든한 약속

MetLife®

메 트 라이 프 생 명



©2010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2010 Peanuts
www.metlife.co.kr 고객센터: 1588-9600